

이 자료는 산업자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이 지난 1월 16일
 "2004년 산업정책연구원 신년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임.
 - 편집자주 -

에너지 · 자원정책 방향 및 과제

산업자원부

I.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현황

1. 에너지 소비추이

〈에너지원별 국내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 백만 TOE, %)

구분	1980	1990	1995	2000	2002	연평균증가율(%)	
						80~90	90~00
석유	26.8 (61.1)	50.2 (53.8)	94.0 (62.5)	100.3 (52.0)	102.4 (49.1)	6.9	7.6
석탄	무연탄 9.9 (22.5)	9.9 (10.7)	2.9 (2.0)	3.1 (1.6)	4.0 (1.9)	0.3	-11.7
	유연탄 3.3 (7.6)	14.4 (15.5)	25.1 (16.7)	39.8 (20.6)	45.1 (21.6)		
LNG	-	3.0 (3.2)	9.2 (6.1)	18.9 (9.8)	23.1 (11.1)	-	20.1
수력	0.5 (1.0)	1.6 (1.7)	1.4 (0.9)	1.4 (0.7)	1.3 (0.6)	12.4	-1.2
원자력	0.9 (2.0)	13.2 (14.2)	16.8 (11.1)	27.2 (14.1)	29.8 (14.3)	31.3	7.5
기타	2.5 (5.7)	0.8 (0.9)	1.1 (0.7)	2.1 (1.1)	2.9 (1.4)	-10.9	10.3
합계	43.9 (100.0)	93.2 (100.0)	150.4 (100.0)	192.9 (100.0)	208.6 (100.0)	7.5	7.5
전력	32.7	93.4	239.5	239.5	278.5	11.2	9.8

* () 내는 1차 에너지 구성비(%)
 전력은 최종에너지 소비기준임

-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1990년대 연평균 7.5% 증가)
-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 세계 6위 석유소비국
-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脫석유 · 에너지원 다원화 추진
- 석유는 LNG 등 타연료 사용 확대로 비중 대폭 감소
- 무연탄은 대폭 감소하고, 유연탄은 발전용 수요 확대로 증가
- LNG는 도시가스 보급, 발전 수요 등으로 소비 급증
- 전력은 고급에너지 선호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원자력은 원자력발전 시작(197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 에너지공급구조

- 수입에너지
-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총에너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석유는 중동에서 73% 이상 수입
- 2002년 에너지수입액은 320억불로 전체수입에서 에너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수준

□ 국산에너지

○국산에너지는 수력, 신·재생에너지, 무연탄 등으로 국내 총에너지 소비의 3% 내외에 불과

(에너지 수입현황)

(단위 : %)

구 분	1980	1990	2000	2002
에너지 해외의존도	73.5	87.9	97.2	97.2
1차에너지소비중 석유비중	61.1	53.8	52.0	49.1
에너지 수입액(억\$)	65.8	109.3	375.8	320.0
(총수입중 에너지수입비중)	(29.5)	(15.6)	(23.4)	(21.0)
석유수입 중동의존도	98.8	73.7	76.9	73.3

□ 자주개발 에너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개발하여 확보한 에너지는 에너지원별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2년 기준)이 각각 석유 2.7%, 가스 3.8% 유연탄 24.2%

II.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1. 시기별 에너지정책

□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목표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시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하였던 석유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 추진

<1980년대>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에너지원의 다원화, 에너지공급 인프라 확충 등 안정적 수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1990년대>

○1990년대 초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국내 에너지수급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에너지산업에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시행

<1990년대 후반 이후>

○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자연독점으로 간주되어 온 전력·가스 등의 Network 산업에 경쟁 도입을 추진
○에너지안보, 시장효율성,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이 에너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대두

2. 주요성과

□ 공급설비 확충 및 에너지산업의 네트워크화

○에너지소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급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실현
○특히 전력·석유·도시가스·열에너지의 네트워크형 공급기반이 확장됨으로써 선진형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 전력공급 예비율(2003년말) : 17.1%
- 석유비축(2003년말) : 102일
- 천연가스 배관망(2003년말) : 2,435km
- 송유관망(2003. 8월말) : 1,081km

□ 국내·외 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경우(2003. 6월 기준), 총 41개국에 150개 사업이 추진 중.
- 파시르 유연탄광(인니, 1987년 생산개시), 마리브 유전(예멘, 1993년 생산개시), 15-1유전(베트남, 2003. 10 생산개시)개발 등 구체적인 성과 거양
○대륙붕 동해-1 가스전 생산 가시화 등 국내 자원 개발 사업도 추진

-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착수
 -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가스·지역난방 부문의 민영화 및 구조개편 착수
- 에너지수요 안정화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에너지원단위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에너지수요증가세가 완화
 - * 1차 에너지소비 증가율(%) : (1980~1990) 7.8, (1990~2000) 7.5, (2001) 2.9, (2002) 5.2
 - * 에너지원단위(TOE/GDP백만원) : (1990) 0.414, (2000) 0.403, (2001) 0.402, (2002) 0.398
 - 특히, 석유의존도는 에너지다변화 노력을 통해 2002년 50% 이하로 하락
 - * 석유의존도(%) : (1980) 61.1, (1990) 53.8, (2000) 52.0, (2001) 50.6, (2002) 49.1
- 에너지가격 적정화 방안 추진
 - 에너지절약 및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가격 예시제를 통해 2001. 7 ~ 2006. 7에 걸쳐 에너지가격 개편을 추진

〈단계별 상대가격 조정안〉

(단위 : 휘발유 100일때의 상대가격)

구분	수송용			가정용			산업용	
	휘발유(ℓ)	경유(ℓ)	LPG(ℓ)	등유(ℓ)	LPG(ℓ)	LNG(m³)	중유(ℓ)	LNG(m³)
2000. 7월	100	47	26	40	31	37	22	26
2001. 7월	*	52	32	43	*	*	*	*
2002. 7월	*	56	33	45	*	*	*	*
2003. 7월	*	61	43	48	*	*	*	*
2004. 7월	*	66	49	50	*	*	*	*
2005. 7월	*	70	54	53	*	*	23	*
2006. 7월	*	75	60	55	*	*	*	*

Ⅲ. 에너지 장기수요 전망 및 정책여건 변화

1. 장기 수요전망

가. 주요 에너지지표 전망

- 향후에도 국내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 등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자동차·가전기기 보급확대 추세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총에너지 수요) 2001~2011년간 연평균 3.1%, 2001~2020년간 연평균 2.4%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01년의 1.6배 수준인 311.8 백만TOE에 달할 전망
- (1인당 에너지수요) 2001~2011년간 연평균 3.6%, 2001~2020년간 연평균 2.0% 증가하여, 2020년에 6.2TOE에 이를 전망
- (에너지 원단위,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 2001년 0.40에서 2011년 0.33, 2020년 0.27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

〈주요 에너지경제지표 전망(기준안)〉

구분	2001	2006	2011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01~'06	'01~'11	'01~'20
총에너지수요 (백만TOE)	198.3	237.6	269.3	288.2	311.8	3.7	3.1	2.4
1인당 에너지수요 (TOE/인)	4.88	4.88	5.41	5.72	6.16	3.1	2.6	2.0
에너지/GDP (TOE/55년 백만원)	0.40	0.37	0.33	0.30	0.27	-	-	-

* 자료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

나.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석유는 총에너지중 비중이 2001년 50.6%에서 2020년 44.8%로 낮아지나 여전히 주종 에너지로

서의 역할 담당

- LNG는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2001년 10.5% → 2020년 15.4%)
- 유연탄과 원자력은 전력수요의 증가로 지속적 증가 예상
 - * 전력수요는 고급에너지 선호추세로 지속 증가 전망
-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낮을 전망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수요 전망(기준안)〉

(단위 : 백만 TOE, %)

구분	2001 (실적)	2002 (실적)	2006	2011	2020	연평균 증가율(%)			
						'01~'06	'01~'11	'01~'20	
석유	100.4 (50.6)	102.4 (49.1)	116.3 (48.9)	125.4 (46.5)	139.6 (44.8)	3.0	2.2	1.8	
석탄	무연탄	3.7 (1.9)	4.0 (1.9)	2.8 (1.2)	2.3 (0.9)	2.3 (0.7)	-5.6	-3.5	-2.5
	유연탄	42.0 (21.2)	45.1 (21.6)	49.7 (20.9)	57.7 (21.4)	60.3 (19.3)	3.4	3.2	1.9
LNG	20.8 (10.5)	23.1 (11.1)	31.2 (13.1)	33.2 (12.3)	48.0 (15.4)	8.5	4.8	4.5	
수력	1.0 (0.5)	1.3 (0.6)	1.1 (0.5)	1.2 (0.5)	1.2 (0.4)	0.8	1.6	0.5	
원자력	28.0 (14.1)	29.8 (14.3)	32.6 (13.7)	43.5 (16.2)	52.0 (16.7)	3.0	4.5	3.3	
신탄·기타	2.5 (1.2)	2.9 (1.4)	4.0 (1.7)	5.8 (2.2)	8.6 (2.7)	11.5	9.6	7.1	
합계	198.4 (100.0)	208.6 (100.0)	237.6 (100.0)	269.3 (100.0)	311.8 (100.0)	3.7	3.1	2.4	
전력(10억Kwh)	257.7	278.5	321.2	362.9	-	4.5	3.5	-	

* 자료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 () 내는 1차 에너지 구성비(%), 전력은 최종에너지 소비기준임

2. 국내외 여건 변화

가. 국내여건

- 에너지 공급구조의 취약성 증대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상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 및 중등의존도가 높아 에너지공

급구조가 매우 취약

- 개발가능한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무연탄, 수력 등)이 거의 없어 해외의존도가 심화될 전망
- 전력·가스 비중 증가 등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현상 가속화
 - 국민소득 증대로 냉방기기, 가전기기, 등의 보급확대로 인한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선진국은 난방·취사도 전기 사용)
 - 천연가스 및 지역난방 보급 확대에 의한 가스이용 증가

□ 에너지시설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송·배전설비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로 사회적 비용 급증
 - 특히,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대기오염방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환경단체 등은 안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

□ 시민단체 등의 에너지정책 참여 요구 증대

- 일반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나. 해외여건

□ 에너지안보의 중요성 재인식

- 중동정세 불안, 중국의 에너지소비 급증, 북해 유전고갈 등으로 에너지안보 중요성 再부각
 - * 캘리포니아 정전, 미국동부 정전, 이태리 정전 등이 극단적인 사례로 등장
-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석유확보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있고, 미국정부는 원전 건설을 촉진하려는 시책 전개(체니보고서)

- 국제 석유시장의 질서 재편
 - 석유·가스의 경우 중동외의 지역인 카스피해, 러시아지역(이르쿠츠크·사할린 등) 등에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
 - 이라크의 정국안정화시 이라크産 석유수출 확대 가능성
-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환경규제의 가시화
 -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에너지부문에 발생하고 있는 우리 여건상, 감축의무 현실화시 에너지사용에 커다란 제약 예상
-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지역은 한국·일본 등 에너지 大소비국과 러시아·중국 등 대규모 자원부존국가가 공존
 - 소비국간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확보 경쟁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동북아 에너지협력 필요

IV.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과제

1. 기본방향

·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

-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 대응
 -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추진
- 에너지 공급안정대책 적극 추진
 - 공급선 다변화, 해외자주개발 제고, 비상시 대응능

력 강화 등 에너지 공급안정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적정 규모의 원전을 포함한 발전설비 및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등을 확충

-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 에너지 낭비요인 제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 에너지 수요관리의 지속적인 강화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 환경문제가 전혀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추진
- 동북아 에너지협력 강화
 -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주도적 구성과 역내 자원개발 적극 참여 추진

2. 주요 에너지 정책과제

① 과제1 :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 대응

- 기후변화협약의 의의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1992. 6)으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의무를 부담
 - * 선진국(Annex I) : 2008~2012년 기간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교토의정서, 1997)
 - * 개발도상국(Non-Annex I)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 국가전략의 수립·시행,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작성 등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도국(Non-Annex I) 지위로 가입하여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은 없음
 - 그러나, OECD회원국이며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압력은 점차

가중될 전망

□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의 영향

○ 온실가스 배출량의 83.5%가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26.3%)이 여전히 높은 수준

*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비중(2000) : 에너지(83.5%), 산업공정(10.6%), 폐기물(4.1%), 노숙산(2.9%)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에너지 부문부터 우선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 추진이 필요

□ 대응방안

○ 의무부담협상 대응 능력의 제고

- 제2차 의무이행 부담기간(2013~2017)중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멕시코, 브라질)와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응체계 강화

-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방안 마련 및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3개대학, 45억원)
- 발전·석유화학·정유 등 업종별대책반 운영을 통해 산업계 대응 노력을 지원

○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의정서 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 온실가스 국가통계체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도출을 위한 에너지 설비·기술DB구축 완료

* 현재 석유화학·자동차 등 7개 부문의 설비·기술DB완료(2002년말)

-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에 대비해 발전시간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체계 구축 추진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사업(CDM) 활용 기반 마련

* 에너지관리공단을 CDM인증기관(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인증기관)으로 인정되도록 추진

② 과제2 : 에너지공급안정대책 적극 추진

□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 향후의 석유위기에 대비한 비상대응능력 강화
 - 석유비축 및 유가완충준비금의 지속 확충
 -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방식 및 대상지역 확대 추진
- 가스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동절기 도입 비중 제고 등으로 동고하저 수요패턴에 대비하고, 인수기지, 배관망 등 가스인프라를 지속 확충

○ 중·장기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발전설비 지속 확충

- 부산복합 3·4호기, 영흥 화력 1호기 등 신규 발전설비 준공(2004년 상반기)
- 2011년까지 신고리 1·2호기 등 8기의 원전 건설 추진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노력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 가스관련 기술기준을 코드화하여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고 전기사업용 배전설비의 검사제도 도입으로 안정성을 제고(현재 발전·송변전설비만 검사)
- 재래시장 불량전기시설 개선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강화

□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확대

- 동해-1 가스전 상업생산을 통한 산유국 진입 및 국내유전 추가 탐사활동 강화
- 해외유전 탐사 및 지분참여 등을 통해 자주개발을 제고
 - 카스피해, 이라크 등 주요 유전지역에 대한 전략

적 진출 확대

- * 카스피해 주요 자원국인 카자흐스탄과 자원협력위 개최(차) 추진
- 주요 유전사업의 개발 및 생산을 본격화하고 생산유전 매입등을 통해 석유 자주개발을 제고

□ 주요광물의 해외개발 및 북한과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연계하여 중국 유연탄 개발·도입을 추진하고 페루 등 중남미 지역의 자원개발 본격 참여
- * 中 섬서성 유연탄광 지분참여 추진, 페루 Coastal Belt(銅) 탐사실시 등
- 북한의 정춘 흑연광산 사업추진 및 서한만분지 공동탐사 시행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 IEA 등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에너지위기에 공동 대응
- 대규모 에너지 소비국과 부존자원이 풍부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에너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
- 중국, 인니 등 9개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위를 활성화하고, 필리핀 등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협력위 신설 추진

③ 과제3 :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절약기반 마련

- 산업부문 : 다소비업체 중심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
 - 산업체의 자발적 협약(VA) 체결을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관리실태를 진단하여 개선방안 제시
- 건물부문 : 선진형 에너지 저소비시스템 기반 구축
 -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ESCO사업 지속 추진
 -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업자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전

문기관이 검토토록 하여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도모

- 지역난방보급 확대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CES)적극 추진
- 수송부문 : 총량적인 연비 향상 추진
 - 자동차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 및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강화

□ 에너지 이용기기 효율 향상 및 보급 확대

- 절전형기기 등 효율관리제도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에너지 절약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이 큰 중·대형 기술 중심으로 절약기술 개발 지속 추진

□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화

- 환경·여성·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등 민간 주도 에너지절약운동 정착

④ 과제4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란 원자력 또는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로서 환경친화적인 장점은 있으나, 화석연료 대비 2~10배 고가임
 -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폐기물 등 11개 에너지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해외의존 화석연료 고갈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보급 필요

□ 현황

-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2년 총 1차에너지 소비의 1.4%(수력포함시 1.9%)로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 및 보급투자 미흡
 - * 기술개발투자비가 미국의 2% 일본의 3.5%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비중(2000년)〉

(단위 : %)

덴마크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10.8	6.8	5.0	3.3	3.2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추진
 - 중점과제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및 개발된 제품의 신뢰성 인증 등 관련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
 - 시장잠재력 및 기술 중요성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기반조성, 보급사업 본격 추진(각 사업별로 100억~300억원 수준)
 - 수소·연료전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개발 추진
 - 태양광·풍력 부문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신뢰성 인증 대상제품 확대
 -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Green Village 사업 확대 등 지속적인 보급 사업을 전개
 -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 전개(2004년 200호 규모)
 -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비설치 사업 착수
 - * 대상 신축건물의 수요조사, 자금지원 등
 -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5개 분야 발전전력 차액지원 확대
 - 관련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추진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개편
 - * 2003년 12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기술규정 제정 등)

5 과제5 :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주도적 추진

-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극복하고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서 동북아 에너지협력 적극 추진
 - 동북아 지역은 에너지 대소비국과 대규모 자원부국이 공존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로 win-win성격의 협력이 가능
 - * 동북아 역내국가(6개국)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 * 동북아 지역은 세계 에너지자원 부존량중 천연가스 33%, 석탄 32%, 석유 8% 점유하고, 세계 에너지소비의 20% 점유
 - 동북아에 부존된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개발 도입을 통해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 유도
-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축 추진
 - 「동북아 에너지협력 종합추진계획」 수립
 - 체계적인 역내 에너지협력 추진을 위한 중장기 Road Map 마련
 - 역내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을 주도함으로써 우호적인 대외에너지 협력환경을 조성
 - 동북아에너지협력실무협의회의(SOM) 개최(2004년 상반기, 서울) 하여 역내국가간 에너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장기적으로 「동북아 에너지장관회의」로 격상 검토
- 동북아에너지연구소 설립 추진
 - 역내 협력사업 공동연구 및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 등 동북아 에너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내에 설립